

공천 갈등·이념 논란·무관심... '三災 國감'

선거구 확정 등 민감 사안 겹쳐 이렇다 할 성과 없어

오늘 영산강환경청·내일 전남도·전남경찰청·전남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차 국정감사가 내년 총선에서 적용될 선거·공천제도와 선거구 확정 논란이 겹치면서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상임위에서는 이념 논란으로 파행이 거듭되고 막달 전력에 대한 책임론이 이어지는 등 정책 국정과는 동떨어진 모습도 전개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미방위(미래장조각화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서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산주의자', '친북인사' 등 위험수위의 발언들이 여과 없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과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사실을 집중 비판하자, 고 이사장은 "(근거가) 준비해온 것만 12페이지"라고 받아쳤다.

야당 의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 세력은 이적이라는 발언이 사실이나"고 묻자, 고 이사장은 "그렇게 말한 적은 없고 민주민주주의론자들"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고 이사장은 "친일인명사전이 사회를 분열시킨다", "사법부가 좌경화됐다" 등 소신을 그대로 쏟아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특히 고 이사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언급하면서 "문 대표와 한 전 총리는 사법부 전체를 부정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고 이사장의 답변을 문 제 삼아 회의를 박차고 나가 국감이 30여분 파행을 겪기도 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고 이사장은 '친북국가인명사전'을 근거로 국감위원인 새정치연합 이상호 위원에 대해서도 친북행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해 국감이 재차 파행됐다.

고 이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산주의자였지만 전향했다고 발언하는 등 민감한 발언을 그치지 않았다.

한국투자공사(KIC)를 상대로 한 기재위 국감에서도 현안보다는 안홍철 사장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트위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거칠게 비판한 사실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됐다.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은 "사장 임명 무효 사유다. 자리를 계속 고수하는 건 노욕으로부터 안 보인다"고, 같은 당 박병계

의원은 "재정권자(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물러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한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라고 꼬집었다.

안 사장이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자 야당 의원들은 "시간만 보낼 거면 국감을 받지 말고 물러나라"고 몰아붙였다.

국토교통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방위 등에서도 국감을 이어갔지만 총선 공천 물과 선거구 확정 등의 논란이 겹치면서 1차 국감에 비해 집중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야당의 결정적 한 방 없이 어정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5일에는 국회 한노위는 국회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6일 국회 안행위는 전남도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대해, 국회 교문위는 전남대와 전남대 병원에 대한 국감에 나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당 빈 새누리당 대표 집무실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에 나설 후보자 공천 방식을 결정지를 특별기구를 5일 출범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특별기구 구성 방식을 놓고 김무성 대표측과 당내 친박계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특별기구는 출범도 하기 전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4일 오후 국회 내 김무성 대표의 집무실 모습. /연합뉴스

R&D 예산지원

전남, 전국 꼴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의 R&D(연구·개발) 예산 지원액이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 중 전남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4일 산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R&D 예산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6년간 산기평 지원 R&D 예산 중 전남은 20건에 85억원을 지원받아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하고 광역시·도 중 가장 적었다. 이는 6년간 전체 R&D 지원액 7조 2790억원의 0.1%에 불과한 자금이다.

또 광주와 대구도 지난 6년간 136건에 1180억원을 지원받아 광역시 중 가장 적었고, 15개 시도 중에서도 전남·강원·전북에 이어 4번째로 적은 지원을 받았다.

반면, 경북의 경우 6년간 516건에 4194억원을 지원받았고, 경남은 473건에 3680억원, 부산은 404건에 2197억원, 대구는 459건에 3553억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주 의원은 "지난 6년간 전남의 R&D 예산은 경북의 2%에 불과하고, 전남이 6년 동안 지원받은 금액이 85억원인데 이는 경남을 한해 지원받은 금액 594억원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더욱이 광주와 전남, 전북 3개 시도가 지원받은 예산이 2225억원인데 이는 경북(4194억원)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R&D 예산마저 영남에 편중된다면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野, 이번주 '선출직평가위' 구성

조은 위원장 임명 강행 태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주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면서 또다시 계파 간 충돌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평가해 '하위 20% 물갈이'의 토대자료를 만드는 기관이다. 따라서 현역 의원들에게 '저승사자'로 통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를 주축으로 한 주

류진영은 비주류진영의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당 핵심 관계자는 4일 "이번 주 안에 평가위원회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조 명예교수에 대한 반발도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뽀족한 대안도 없지 않다"라며 강행을 시사했다.

여기에는 총선제 전환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애초 평가위 구성 시점은 지난달 20

일이었다. 계획보다 보름 가까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진성호 전라기획위원장 이 문 대표에게 평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비주류진영은 조 명예교수가 2012년 총선 당시 공천위원으로 일했던 경력 등을 문제삼아 반대의견을 펴고 있다.

비주류 진영의 한 인사는 "19대 총선 당시 진노진영에 유리한 공천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며 "군이 당시 공천에 참여한 인사를 다시 기용해 논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감 인물

"DNA 감식 없이 유해 中 송환...오류 가능성"

"성추문 육군 소장, 암 핑계 전역" 추궁 등 활약

권은희 새정치 의원



어 패소하는 방사청의 허술한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육군 국감에서는 성추문을 감추기 위해 암치료를 핑계로 서둘러 전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육군 소장 홍모씨의 전역지원서가 위변조된 사건을 집중 추궁해 파장을 일으켰고 정부의 수사를 이끌어냈다.

군인공제회 국감에서는 부진사업 규모가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등 부실투자가 이루어지는 이유로, 전문성이 부족한 군 출신 인사가 임원의 6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병무청 국감에서는 현역 복무 부적격자를 끌라내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정책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지적했고, 현역복무부적합 병사가 1년 새 2.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입대 전에 심리검사 시스템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부지는 국방부 소유가 아니다'라는 점을 최초로 밝혀낸 이후 군부대 이전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성과를 냈다. /박지경기자 jkpark@

與 공천률 갈등, 野에 불똥

'안심번호제 도입법' 통과 불발시 野도 수정 불가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잠정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놓고 청와대와 김 대표가 정면으로 충돌한 끝에 새누리당이 공천 물음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이 여파가 새정치연합 경선물에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경선물은 안심번호제 도입을 전제로 한 100% 국민참여경선이다. 그러나 자칫 정치개혁특위에 계류 중인 안심번호 도입법이 이번 사태의 파장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야당도 경선물을 수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겉으로는 여야가 정개혁특위에서 안심번호법 통과에 합의한 만큼 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만일 안심번호제가 정개혁특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야당 내에서도 경선물을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안심번호제 미도입시 '일부국민 70%, 당원 30%' 비율로 경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경선물을 다시 설계하자는 의견이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비주류를 중심으로서는 국민과 당원 비율을 50%씩으로 하자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에는 다시 공천물을 둘러싼 주류와 비주류 간 치열한 힘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 공천제도 논의를 위한 당내 특별기구를 오는 5일 발족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임대보증금 대출

감정가 대비 70% 가능

최대 2,000만원 가능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키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